

5년이 우려되는 박근혜의 경제학 수준

2012.7.17

여경훈 새사연 상임연구원 (noreco@korea.ac.kr)

박근혜, 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일류국가의 비전은 ‘대한민국 747’을 통해 달성됩니다. 연7% 경제 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이는 2007년 MB 대선공약집(‘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 실린 이른바 747공약으로 알려진 국가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기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MB는 747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조로 대선 경쟁자였던 박근혜의 ‘줄푸세’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 반 동안 친기업·친시장을 모토로 줄푸세, 즉 MB노믹스를 가열차게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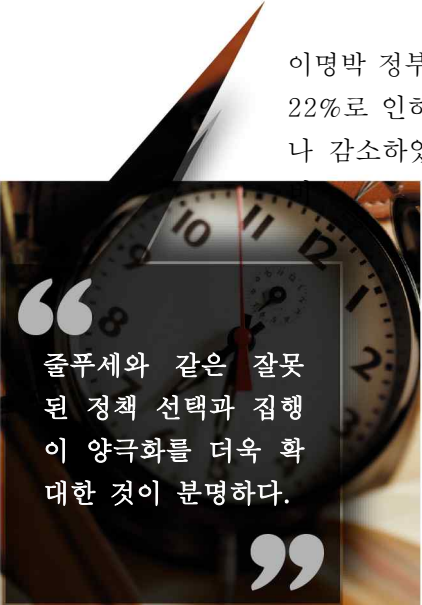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박근혜 또한 이러한 시대사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달라졌겠지’ 하고 일말의 기대를 품은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16일)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줄푸세에서 경제민주화로 바뀐 것은 경제상황이 바뀐 것이냐, 경제철학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큰 틀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법인세는 결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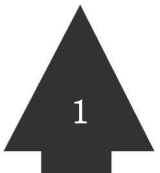
재벌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7%에도 못 미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고세율이 2009년 25%에서 2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3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다. 또한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에 따라 과표 대 총부담세로 계산한 실효세율은 2010년에 16.6%로 떨어졌다.

실효세율은 2008년 20.6%에 비해 평균 4%p 감소하였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표가 증가할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
줄푸세와 같은 잘못된 정책 선택과 집행이 양극화를 더욱 확대한 것이 분명하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한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97%에 불과하였다.

[표2] 2010년 과표별 산출세율과 실효세율

과표 기준	법인수	산출세액	산출세율 (A)	부담세액	실효세율 (B)	A-B	감면율
합계	440023	36.92	20.67	29.58	16.56	4.11	19.88
손실	204294	-		-			
0~10	223730	3.68	14.27	2.92	11.31	2.96	20.73
10~100	10463	5.80	20.60	4.55	16.13	4.47	21.70
100~200	719	2.18	21.76	1.81	18.06	3.70	17.02
200~500	453	3.08	21.93	2.61	18.59	3.34	15.21
500~1000	165	2.60	22.34	2.14	18.43	3.91	17.48
1000~5000	157	7.32	21.99	6.08	18.27	3.72	16.92
5000억 초과	42	12.24	22.00	9.44	16.97	5.03	22.84

* 산출세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실효세율 = 부담세액/과세표준, 감면율 = (산출세액-부담세액)/산출세액

[표1] 2008~2010년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

과표 기준	2008	2009	2010	2010-2008
합계	20.55	19.59	16.56	3.99
0~10	15.53	12.46	11.31	4.22
100~100	19.68	18.98	16.13	3.55
100~200	21.18	21.26	18.05	3.13
200~500	22.08	21.18	18.59	3.49
500~1000	21.96	21.60	18.43	3.53
1000~5000	21.94	20.91	18.27	3.67
5000억 초과	21.06	20.71	16.97	4.09

2008년과 비교하면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4.1%p 감소하였다.

과표 100~200억인 중견기업보다 1%p 정도 더 많이 줄어들었다.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과표 200~500억인 중견기업보다 7.64%p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감면액(산출세-부담세) 규모는 7.4조로 이 중 38%인 2.8조를 41개 재벌대기업이 독자치하였다. 기업수로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개 재벌대기업은 매년 평균 686억 원 씩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산출세액에서 부담세액의 차이는 세액 공제와 감면으로 구성된다. 세액 공제 5.56조 중 주로 재벌대기업에 이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가 3.6조로 전체의 65.5%를 차지하였다.

[표2] 2010년 과표별 산출세율과 실효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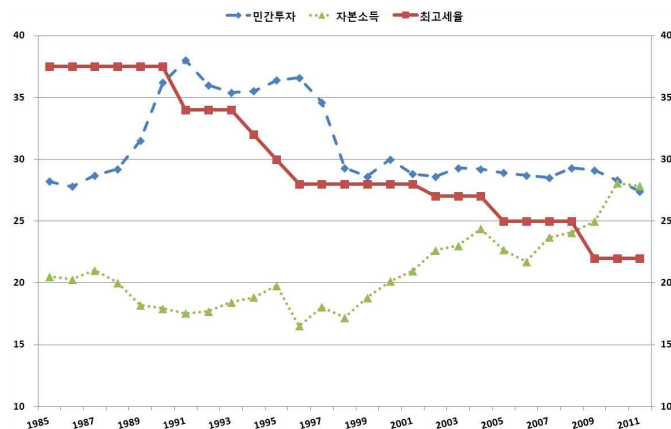
과표 기준	법인수	산출세액	산출세율 (A)	부담세액	실효세율 (B)	A-B	감면율
전체	440023	36.92	20.67	29.58	16.56	4.11	19.88
0~10	223730	3.68	14.27	2.92	11.31	2.96	20.73
10~100	10463	5.80	20.60	4.55	16.13	4.47	21.70
100~200	719	2.18	21.76	1.81	18.06	3.70	17.02
200~500	453	3.08	21.93	2.61	18.59	3.34	15.21
500~1000	165	2.60	22.34	2.14	18.43	3.91	17.48
1000~5000	157	7.32	21.99	6.08	18.27	3.72	16.92
5000억 초과	42	12.24	22.00	9.44	16.97	5.03	22.84

* 산출세율 = 산출세액/과세표준, 실효세율 = 부담세액/과세표준, 감면율 = (산출세액 - 부담세액)/산출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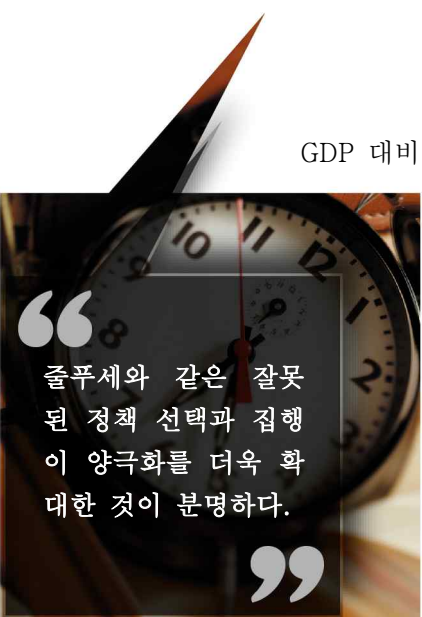
한편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렸는데, 감세 이전인 2008년 실효세율을 2010년 과표에 적용할 경우 2010년에만 7.1조 원 가량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이 중에서 500억 초과 364개 대기업이 전체 감세혜택의 54.8%인 3.9조를 차지하였다. 특히 42개 재벌대기업은 2010년 전체 31.9%에 달하는 2.3조의 감세혜택을 독차지하였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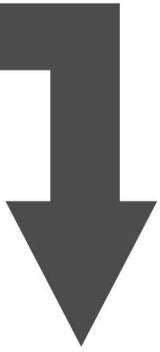
박근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나라와 (조세)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경쟁력'을 모토로 내건 YS 정권 이래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GDP 대비 민간투자 비중을 보면 최고세율이 37.5%에 달하던 1980년대 후반, 민간투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반면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6%p 법인세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특히 MB 집권 4년 동안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0.4%로 딱 떨어졌다. 그리고 2008년부터 외국인의 국내투자에서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차감한 대외 순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
 줄푸세와 같은 잘못된 정책 선택과 집행이 양극화를 더욱 확대한 것이 분명하다.
 ”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경제이론은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근거하고 있다. 투자의 원천은 '이윤'이며 법인세는 세후이윤을 늘리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국민소득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6.5%에서 2011년 27.8%로 10.3%p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조정노동소득 분배율은 75.2%에서 62.7%로 12.5%p 떨어졌다. 또한 2000년대 연평균 기업소득 증가율은 25.5%에 달했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5.7%에 불과하였다. 가계의 소득증가율 하락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총저축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44%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졌다.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63%까지 늘어났다. 가계저축률은 1980년대 15.7%에서 1990년대 19.7%로 증가하였다.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이 가계의 저축률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동 비율은 4.7%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7%까지 하락하였다. 경제성장의 수혜가 기업에 집중되었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이 또렷해 진 것이다.

줄푸세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라 한다.

경제민주화는 엄밀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소득과 부의 재분배, 기회의 균등 보장, 경제주체간 힘의 균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을 경제민주화라고 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경제자유화 또는 규제완화라고 한다. 국제적으로는 더 낮은 세율과 자본에 유리한 노동 환경을 쫓아 경쟁한다고 해서 race to the bottom 현상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세계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광풍에 휩쓸렸다.

그러나 세계사적 흐름과 더불어 줄푸세와 같은 잘못된 정책 선택과 집행이 양극화를 더욱 확대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MB 정권에서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한 효과가 무엇이었나? 300대 대기업에 매년 4조 원 이상의 이윤을 늘려 주었지만,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0.4%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또렷해졌다. 더 이상 투자유도를 감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복지확대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극화 해소를 통한 내수 촉진, 금융 불안정성 해소, 그리고 혁신형 산업정책 등으로 민간투자를 높여야 한다. 만약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겠다고 답하는 학생이 있다면 필자는 F를 줄 것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와 5년 MB노믹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경제 활동에 전혀 참가해보지 못한 사람, 경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엉망인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2012년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정권교체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기억하라 MB, 반박하라 박근혜_새사연)



새사연의 6년 연구결과를 모두 모은 새 책!

리셋코리아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이 출간 되었습니다.